

학생들 “불안해도 예방 우선”...자영업자 “연말 장사 망쳤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에 제재 등이 걸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쏟아내면서도 확산세가 얼마나 지속될 지 불안해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찾아가는 백신접종'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동의하면서 접종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미접종으로 인한 감염 우려 등을 불안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백신접종' 앞둔 학생들도 걱정=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1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신강동 신가중에서 처음 시작됐다.

광산구보건소 의료진은 이날 오전 학교 강당에 임시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접종 시작 시간인 오후 1시가 되자 접종을 예약한 학생 20여명이 강당으로 들어섰다.

이 학교 재학생들 761명. 하지만 이날 학교 방문 접종에서 맞겠다고 예약한 학생은 72명에 그쳤다. 신가중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 접종한 학생들도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접종 부작용을 우려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전해졌다. 반 친구 중 1-2명 정도는 부작용이 두려워 백신을 안 맞겠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학생들 얘기다.

강당에 들어선 학생들은 손 소독을 마친 뒤 대기 장소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접종 차례를 기다렸다. 강당에 들어설 때만 해도 장난기 가득했던 학생들은 긴장한 듯 굳은 얼굴 표정이 었 보였다. 주사기가 피부에 닿자 눈을 질끈 감는 학생들 모습도 눈에 띄었다.

광주 신가중 '찾아가는 백신 접종'

"반대하는 부모님 설득해 맞았죠"
부작용 두려워 접종 기피하기도

영업 제한에 암담한 자영업자들

연말특수 기대하며 버텼는데
"또 벼랑 끝에 내몰리나" 허탈

접종을 마친 학생들은 대기석으로 자리를 옮겨 15분간 접종 뒤 이상 반응 여부를 살피다 돌아갔다.

백신을 맞은 3학년 A군은 "직접 병원을 선택하고 예약 날짜를 잡아 접종받으러 가는 게 번거로웠는데, 학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어 신중했다"면서 "부모님은 백신 접종을 반대했지만 설득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92개 중학교 중 88개교가 방문 접종을 신청했고 접종 예약 학생 수는 1915명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오는 24일까지 신청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방역 지침 강화 앞둔 자영업자들도 걱정= '위드코로나' 덕에 연말만 보고 버텼는데, 연말연시 장사 망쳤어요."

정부가 45일만에 위드코로나 방역 지침을 바꾸면서 광주·전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

를 드러내면서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보상 방침을 밝혔음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듯했다. 뒤늦은 방역 조치로 상황을 악화시켜놓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행태라는 비판도 나왔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40년 가까이 고깃집을 운영한 A(67)씨는 "어제 하루 60만원을 벌었다. 하지만 인원 수,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지면 하루에 10만원 벌기도 힘들다"면서 "위드코로나라고 해 이것저것 준비해왔는데 또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북구 용봉동 전남대후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여·58)씨는 "밤 9시 영업제한이 다시 시작되면 1차로 식사를 끝내고 찾는 우리같은 호프집의 경우 사실상 저녁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제 때 취하지 못해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건 정부이며 고통은 우리가 떠안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얼마나 영업을 못하게 되는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북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짧고 굵게 방역 조치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방역 지침이) 풀릴 것인지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 확산세의 원인으로 애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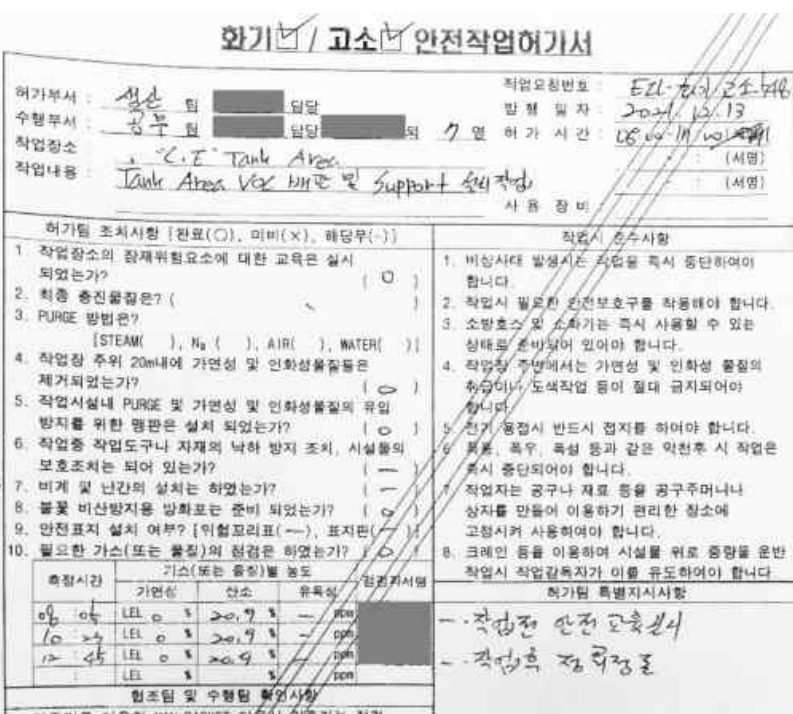
광주지역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이 처음 시작된 1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신가중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산단 화재사고'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가능성

탱크에 화학물질 30% 남았는데 안전조치 없이 용접 작업 한 듯 업체는 '인화성 물질 제거' 작성 노동계 "기록지 등 허위 의혹"

일용직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국가산단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폭발사고(광주일보 12월 14일 6면)와 관련, 해당 작업 과정에서 작성된 작업허가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단독으로 확보한 '안전작업허가서' (사진)는 저장탱크 내부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었는데도, 해당 유기화학물질을 비롯한 작업장 주위 20m 이내 가연성 및 인화성물질을 제거했다는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록되면서 허위 작성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에틸렌 분말을 빼내는 작업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작업허가서가 사고 직후 급조된 것으로 드러난 지난 2013년 여수산단 내 대립산업 폴리에틸렌 공장 폭발사고와 유사하다는 노동계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는 모양새다.



광주일보가 강민정 국회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16일 이일산업의 작업허가서를 보면 사고 당시 작업허가서에는 작업장 주위 20m 이내

가연성 및 인화물질 제거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당시 폭발사고난 난 탱크(90m)에는 화학물질이 30% 가량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화기작업 화재예방 매뉴얼'도 용접 등 화기 작업의 경우 저장 탱크 내부 물질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작업허가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니

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작업허가서는 원청업체가 보수·정비를 맡긴 하청업체에 작업의 시간·내용·조건·요구사항 등을

표시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달하는 문서이며, 현장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탱크 내에 화학물질이 남아있었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산소 농도 측정이 불가능한데도, 작업허가서에 산소농도를 20.9%라고 기록한 점 등 노동계의 허위 작성 의혹이 힘이 실리고 있다.

작업허가서에는 화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용접 작업이 이뤄졌으며 '용접방화포'를 갖췄다는 기록 등 화기작업시 관리감독자 체크리스트 23개 항목이 모두 점검된 것으로 적혀있다.

최관식 민주노동 여수지부장은 "사고 당시 탱크에 30%의 연료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산소 농도를 측정해 놓은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칙대로라면 탱크를 비우고 탱크 하단부의 맨홀을 통해 산소농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탱크에 30%의 연료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측정을 했다더라도 탱크 상부에서 측정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일산업 현장소장과 팀장급 인원과 A플랜트 작업반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날 오전 이일산업과 A플랜트를 압수수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지법 위반 등 혐의 기영옥씨 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추수전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형사 6단독 운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18년 기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땅을 빌린 뒤 불법으로 건설장비와 차량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기씨는 아들 기성용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씨가 사들인 토지에 농지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땅, 군사보호구역, 공원부지로 묶인 땅이 포함된 점을 들어 해당 토지가 사실상 민간공원 특례사업 편입될 경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땅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씨 측은 법을 몰라서 빚어낸 일이라며 농지 무상사용과 불법 전용 혐의는 부인하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